



“새누리 해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신(丙申年) 친박 오적을 규탄’하고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친박 오적으로 이정현, 최경환, 서청원, 홍문중, 조원진 의원을 꼽았다. /연합뉴스

버티는 대통령... 3野 ‘즉각 퇴진’ 힘 합친다

엘시티 수사 지시 등 국정 재개 맹비난...공동전선 구축 범국민 서명운동 등 4개항 공조 합의...잠룡들 20일 모임

야권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부산 엘시티(LCT) 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사실상 민심을 거부하고 다시 국정 장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지금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민을 자극하는 일련의 도발적 언사들로 국가적 불행이 예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퇴진을) 결단하라”고 말했다. 박원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 지지를 잃은 지도자가 국사를 결정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국정 장악에만 몰두하는 건

국민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약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라며 “자기 수사는 받지 않고 엘시티 수사만 철저하라는 건 참으로 적반하장”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퇴진하라는 국민의 최후통첩을 받은 식물 대통령이 일방통치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노회찬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엘시티 비리 ‘엄단 수사’ 지시와 관련 “과하게 말해 지나가면

개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과 야당 성향의 무소속 등 야권 의원 168명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대통령은 검찰 조사 연기와 같은 꼼수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검찰조사에 응하라”며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즉시 소환해 진실을 밝히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죽은 권력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 하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은 모든 진실이 조속하고 철저히 규명되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지기를 갈구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국가를 뒤흔든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이고, 민주공화국 검찰이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박근

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야3당 대표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공동 목표로 뜻을 모으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천에 적극 공조한다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서로 협력하고 협의한다 등 4개 사항에 합의했다. 야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은 오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오찬 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오찬 모임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손학규 전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정배 “박대통령 긴급체포하라”

“최순실 사태 주범 중 주범...피의자 입건 강력 수사 필요”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1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주범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주범이라고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추, 기소를 받지 않는 것뿐이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는 언제든 가장 신속하게 진행돼야만 진실을 발견할 수 있

다”며 “체포 영장을 신청해 체포하는데 따라 긴급체포하는 강력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퇴진이라도 그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관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한다”며 “반드시 총리를 먼저 인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 3당 대표 회담을 하는데 거시 잘 협의해서 먼저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울 생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국정도 관여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도 계속하고 국정교과서도 추진하고 다 할 요량”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권 ‘先 총리 논의’ 솔솔

황총리 권한대행체제 안돼...대통령 퇴진 현실화 대비

야권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로드맵 차원에서 ‘선(先) 총리 논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하야나 정치권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수립되는 거국중립 내각 또는 과도내각에 대비, 절차적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만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민주당 주류층을 중심으로 총리 문제를 논의할 경우 총리 후보군 논의로 초점이 맞춰지며 국면이 전환, 퇴진 요구 전선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아 탄력을 받을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17일 야3당 대표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당간에 입

장차가 드러나는 등 정파간 복잡한 셈법이 얽혀있는 상황이다. 여야 비주류 층들이 주축을 이룬 의원 14명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마련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다. 전원위 소집을 주도했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3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전원위 소집 문제를 거론하면서 “하야는 퇴진요구든 탄핵이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이 야권내 비론 진영에서 주로 감지되면서 이후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의 연대 움직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새누리 잠룡들 결국 탈당하나

남경필 “중대 결심”...비박 “탄핵 어렵다면 분당 밖에”

새누리당 내에서 분당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재창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한 게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차기 대권 잠룡군을 중심으로 탈당을 주도하는 것이어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비상시국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이정현 대표의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 대면 수사를 미루고, 당 지도부 역시 사퇴를 거부하면서

더는 해결책을 찾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비상시국회의의 한 중진 의원은 17일 “탈당과 하야 요구가 나왔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헌법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탄핵도 어렵다면 분당밖에 남은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탈당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원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와 관계가 있던 국회의원들보다는 한 발 떨어져 지방 행정을 담당한 잠재적 대선주자군이 나서는 게 명

분이나 효과 면에서 더욱 호소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략적 판단도 있다. 남 지사나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모두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후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원내 대권 주자와 이에 동조하는 비주류가 새누리당을 떠나 이른바 ‘제3지대’를 구축함으로써 친박계를 고립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이뤄지면 이를 최종 입장이라고 보고 미흡하면 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주류 측이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상황도 분당 가능성을 더 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류 일부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분명히 해당 행위”라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데 이어 박근혜 정부가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의 당 대표로서 모든 영화를 누리 분”이라면서 “지금 당이 위기에 빠졌는데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당에 돌을 던지고 당을 깨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수박람회장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사후활용법 개정안 통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17일 국민의당 이용주(여수갑)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4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

분이다. 이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용이하게 됐다. 또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해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화를 확보했다.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남도지사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축제와 공적시설 유치 등 지역 사업과 연계한 박람회장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양새마을금고